

"본 세미나는 (사) 정보경영연구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환기 한일관계의 도전과 대응

최희식(국민대)

1. 역사문제: 한일 간 인식 차이

▶ 한국과 일본 사이 공유된 역사인식

- 식민 지배는 한국의 뜻에 반한 강제된 것이었으며, 나빴다(무라야마 담화, 간담화).

- But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합법 VS 불법>

▶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이견

- 일본: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관련 법적 청산 완료

- 한국: 일본군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청구권협정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 → 강제동원 배상판결은 '식민지 불법 지배에 유래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권

→ 한일관계의 '잃어버린 10년'

1. 역사문제: 제 3자 변제의 의미와 전망

▶ 제 3자 변제

- 제 3자 변제는 사실상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수용하는 것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어떠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직접 지원했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

▶ 제 3자 변제와 공탁

- 법원이 제 3자 변제의 공탁 수용을 거부(2심과 3심 남아 있음).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제 3자 변제의 운명이 달려 있음.
- 제 3자 변제의 실패는 한일관계에 괴멸적 영향을 줄 것임.

1. 역사문제: 대안

▶ 제 3자 변제를 살리는 일본 기업의 호응조치

- 중국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하나오카 소송': 일본 기업의 보상금 지급, 위령 추모 사업 전개, 불소송 각서로 법정 화해

- '하나오카 소송'의 전제: 국가 간 배상문제의 완결(중국 정부의 배상 포기). 따라서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행위에 간섭하지 않음.

- 제 3자 변제와 일본 기업의 호응(위령추모 사업 전개)이라는 새로운 모델 구축 → 향후 소송에 적용

▶ 일본은 호응할 수 있나?

-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반성 요구할 필요 없음.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설득 노력의 전개.

2. 바다의 문제: 잠복된 갈등

■ 바다를 둘러싼 잠복된 갈등

- 한일 어업협정의 사실상 기능 정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7년째 상호 입어 중단
- 한일 대륙붕협정의 종료: 2025년 종료 통지 시점, 자원조사 등으로 충돌 가능성
- 독도를 둘러싼 갈등
- 초계기 사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 한일 갈등이 역사문제에서 바다의 문제로 중심이동? 바다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높아짐

2. 바다의 문제: 한일 해양협력

- ▶ 우발적 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 중일 해공연락메커니즘(2018년)

- ▶ 한일 해양협력 협의체 구성

- 일본의 관심사항: 대량살상무기 해양봉쇄,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대피를 위한 해상접근

- 한일 해양협력 시스템 구축: 그 속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시스템 구축, 해양의 공동개발, 공동 오염수 모니터링 및 관리 등

3. 안보문제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1: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 강화

▶ 두 동맹의 동조화: ①동맹의 일체화 현상

- 병립적 동맹에서 일체화되어 가는 미일동맹

2015년 동맹조정매커니즘 창설: 자위대와 주일미군 운영 조정, 공동계획 작성 등

2022년 반격능력 도입: 미일 전략자산의 연계와 공유 불가피

-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로 일체화된 한미동맹의 병렬화 현상이 대두되었으나, 윤정부 출범 이후 논의 중단. 2022년 이후, 유엔군사령부 및 일본 내 후방기지의 활성화론 등장

→ 두 동맹의 일체화 강화 현상으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존재한다면 양 동맹의 연계성은 높아질 수 있음.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1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 강화

▶ 두 동맹의 동조화: ② 확장억제의 발전

- 한미동맹

2022년, 4년 8개월 만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2023년, 한미 핵협의그룹 (NCG) 가동

- 미일동맹

2022년, 미일 확장억제 회담, ‘통합억제’ 논의 시작: 미일동맹의 일체화 및 통합적 운영, 핵억제와 더불어 사이버·우주 영역에 있어 억제 등 통합된 억제체제 구축 목표

→ 한미일 확장억제 대화체 구성을 위한 논의 대두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1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 강화

■ 두 동맹의 동조화: ③주변사태에 있어 역할분담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의 주변사태(대만 유사, 일본 유사)와 일본의 주변사태(대만유사, 한반도 유사)에 있어 미국과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함.

미일동맹에 있어 주변사태

미일 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통해 주변사태에 대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이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왔음.

한미동맹에 있어 주변사태

한국의 국내정치적 반발 때문에, 한국의 주변사태에 대한 역할분담은 논의되지 않았음.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있어 차기 스텝은 한미동맹에 있어 주변사태에 대한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화가 될 것임.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1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 강화

▶ 2015년 가이드라인 개정과 한반도

<1998년 가이드라인과 2015년 가이드라인 비교>

<1998년 가이드라인과 2015년 가이드라인 비교>				
1998년 가이드라인	평시	주변사태 “일본 주변지역의 사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본유사사태
2015년 가이드라인	평시	중요영향사태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 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존립위기사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무너질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	일본유사사태 (일본이 침략 받는 상황)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1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 강화

■ 2015년 가이드라인 개정과 한반도: 중요영향사태와 한반도

- 일본은 이러한 중요영향사태의 예로 한반도 유사사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의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교전 등을 거론한 바 있음.
- 일본 정부는 ‘중요영향사태법’ 제정을 통해, 후방지원 항목으로 예전에는 금지되었던 탄약의 제공, 전투기 급유도 가능하게 했음. 동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외국군으로까지 확대하여 한국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었음.
- 피난민 대응에 대해 일본으로의 피난민 유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비전투원 대피에 있어 협력도 규정된 바, 이는 한반도 위기 시, 재한 일본인과 미국인 대피 작업에 있어서 협력을 의미함. 제 3국의 비전투원 대피에 대한 원조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 수색구조, 해양안보에서의 협력을 규정하여, 북한 체제위기 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혹은 탈북자 해양탈출 시 수색구조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짐.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1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 강화

▶ 2015년 가이드라인 개정과 한반도: 존립위기사태와 한반도

- 존립위기 사태시, 일본 자위대는 공해 상에서 미국 함선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거나,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소해작전 등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 하도록 하였음. 자위대의 한반도 내 활동에 대한 한국 국내 우려가 크기에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 정치 이슈가 되었음.
-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한반도 위기 시, 수색구조와 해상작전 및 다양한 작전활동에 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된 것임.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2 - 한일 안보협력의 업그레이드

▶ 한미일 안보협력의 매개변수로서 한일 안보협력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재정의를(질적 전환)에 따라, 삼각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업그레이드는 불가피. 미국의 한일 안보협력 업그레이드에 대한 열망.
- 가이드라인 개정 등 미일동맹 전환작업으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협력 필요성 높아짐. 북핵 위협 증대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높아짐.
- 그러나, 양국 사이의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거부감 존재 → 현실적 대안: 한미일 공동군사 훈련, 정보공유의 증대.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존재해야 함.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2 - 한일 안보협력의 업그레이드

▶ 한미일 안보협력의 매개변수로써 한일 안보협력

- 2009년 4월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가 서명되어 국방 고위급 인사 간 교류 활성화, 부대 교류 및 훈련 참관, 수색구조 부분의 공동훈련 정례화, 함정 및 항공기 상호방문 활성화,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서의 협력 강화 추진에 합의.
- 2011년 군사 정보의 상호 제공 및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한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GSOMIA)> 체결, PKO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위 두 협정은 실질적으로 양국의 첫 군사협정이라는 면에서 주목을 받았음. 전자의 협정은 대북 정보의 상호 공유를 염두한 협정으로 한반도에 대한 한일 안보협력의 성격이 크며, 후자의 협정은 해외 군사전개에 있어 상호협력의 성격이 강함.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2 - 한일 안보협력의 업그레이드

- ▶ 한미일 안보협력의 매개변수로서 한일 안보협력
- 동시에 2003년 부시 정부가 발족시킨 대량 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2009년 한국이 가입하면서 PSI를 통한 한일 안보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가능해졌음.
- 동티모르에서 2002년 PKO 협력을 실시한 이래, 레바논, 이라크, 남수단에서의 PKO 협력 등 협력을 축적하고 있음.
- 북한 체제변혁 시 난민 문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비전투원 대피 등 한일 관심사항이 존재. 동시에 초계기 사건과 같은 돌발적 충돌 가능성도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 상존. 한일 대륙붕 협정 종료 시 해양갈등 가능성 존재▶ 한일 해양안보 협력이 절실함.

4.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한일관계

▶ 한일관계를 둘러싼 양극화된 정치

- 진보그룹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 즉 남북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기에 한반도의 진영화를 억제하는 것을 중시. 한미동맹의 강화를 추구하지만,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여지가 많은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에 부정적 → 한일관계의 낮은 전략적 가치(일본 핵방자론, 재팬 패싱론)
- 보수그룹은 북한과 주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규범을 공유하는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 한일관계의 높은 전략적 가치

→ 한미일 안보협력의 불안정성 및 한일 관계의 불안정성



4.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한일관계

- ▶ 균형점은 존재하지 않는가?
 - 다시 김대중 대통령을 호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억제력과 평화의 균형
 - 북한 문제와 일본 문제의 동시적 해결

5. 일본 외교의 전환과 한일관계

▶ 일본은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어떠한 전략적 목표로 임하나?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민주주의는 유럽’
- 미일동맹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 아베 정부 시기의 중일관계(일대일로와 공동사업 합의, 해공연락매커니즘 창설 등), 러일관계(북방영토 문제 해결, 북방영토에 대한 공동경제활동 합의 등). 기시다 정부의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 : 중국을 포기할 일본은 절대 아니다!!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확대: 유럽 및 NATO와의 관계 강화. 아베 시기, 협력대상국에서 한국은 제외. 기시다 정부는?

→ 일본이 그리는 대전략에서 한미일 및 한일 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에 한정?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확장성에는 소극적(한미일 확장억제 대화 창설 및 핵협의체 구성에 소극적).

6. 나가며: 미일 전략경쟁 하 한일 협력은 가능한가?

- ▶ **한일 간 전략적 자율성의 수렴은 가능한가?**
 - 트럼프 시기, 국제자유주의로부터의 후퇴 및 일방주의로 인해 동맹과의 갈등,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무관심. 동맹국가들은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 바이든 시기, 동맹관계의 복원. 민주주의 연대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의 재구축. 오커스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할분담(남태평양과 북태평양).
- ➔ 2023년 대선으로 인한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에 직면한 동맹국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 ➔ 전략적 자율성: 독자적 핵무장에서 유럽과의 관계 강화, 외교영역의 확대(제 3지대론), 북중러 삼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임.
- ➔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은 수렴할 수 있는가?